



전력수급안정화 대국민 의식실태 여론조사

55.9%,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소비증가율(2002~2010년)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9.1%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가 이하인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와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된 전력 과소비,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민원 등에 따른 발전공급력 건설 지연, 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의 미 정착 등은 수년 간 전력수급에 밝혀진 적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대국민 의식실태조사를 통해 최근의 전력수급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력수급안정화 지표를 추출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낭비요인 없는 효율적인 전력소비의 확산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 (15개 광역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시행했다.

국민들 72.6%, 전력수급안정화 ‘해법’으로 “효율적인 수요관리” 우선 꼽아 “1순위 ‘절전생활화’, ‘발전 공급력 확충’, ‘저에너지소비사회 전환’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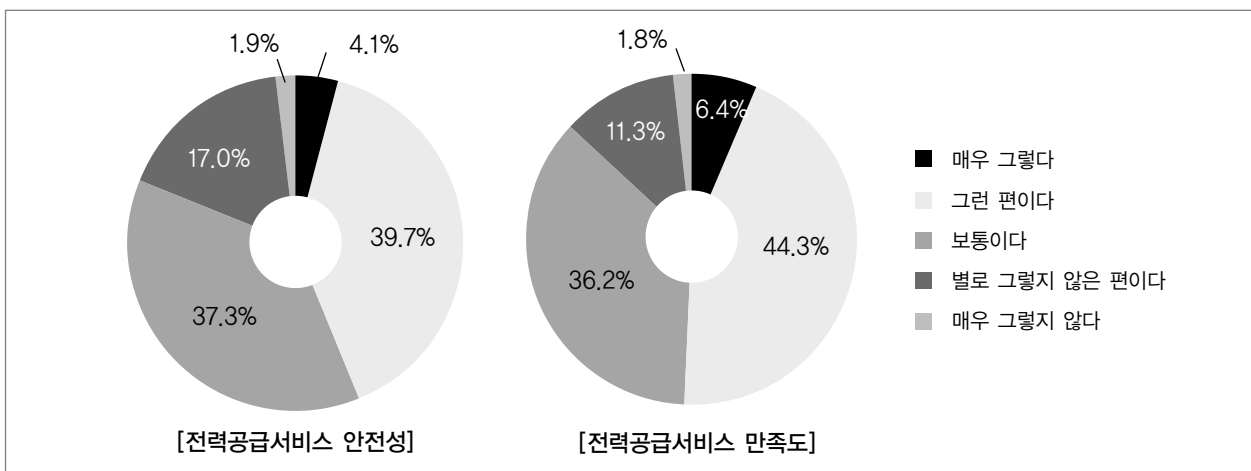
- 전기협회 조사...국민 79.2% ‘전력소비량 많다’고 인식, 절전생활화에는 큰 공감
- 전력수요 불안정의 원인으로 ‘냉난방 수요증가’와 ‘전력과소비’ 꼽아
- “전력수급 불안정 ‘우려’, 블랙아웃 발생가능성 ‘있다’” 응답비율 83.5%에 달해
- 국민 10명 중 6명, 전력예비율 ‘낮은 편’ (58.9%)으로 인식
- 안정적인 발전공급력 확대 위해...무분별한 민원 ‘중단’돼야
- ‘스마트그리드’가 뭔가요? 하지만, 상용화에는 큰 ‘기대감’

국민의 79.2%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전력수요안정화 해법의 우선순위로 ‘절전생활화’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한 ‘발전공급력 확충’, ‘저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과소비단속정책’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전력수급안정화 및 여유 있는 전력예비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6%〈중복응답〉가 ‘절전생활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전생활화’(21%),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17.8%), ‘에너지과소비 단속’(13.1%), 피크요금제 도입(9.5%) 등 수요관리측면에 근간을 둔 답변 빈도가 높았다. 반면, 민간발전소 건설 등 ‘발전 공급력 확충’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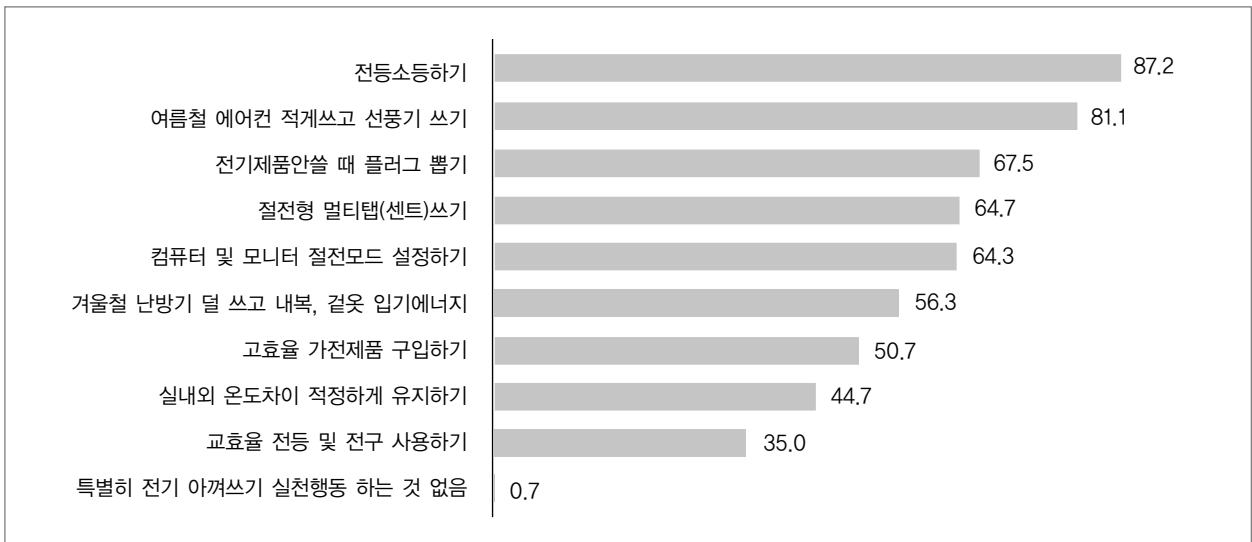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중겸)가 전국 15개 광역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력수급안정화에 대한 대국민 의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전반적인 전력공급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도 지표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43.8%, 50.7%의 응답비율(중립의견 36.2%)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56.5%)이, 연령별로는 50~60대(각각 60.6%, 60.3%)의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력공급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이 비교적 낮은 만족 응답비율은 전력예비율이 낮다는 평가(58.9%), 블랙아웃 가능성 긍정비율(62.0%), 전기 소비량이 많다는 인식(79.2%) 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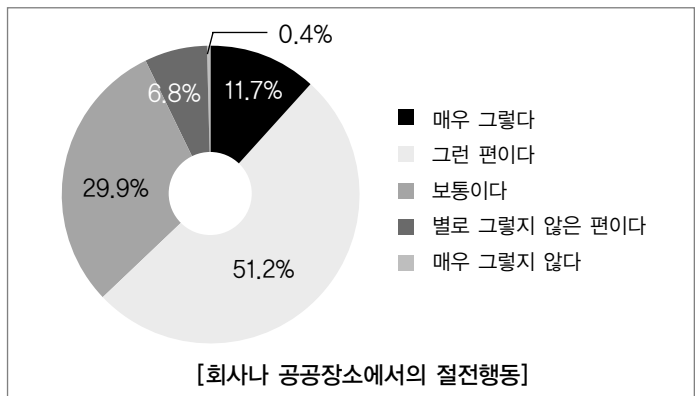
한편,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월 청구되는 전기요금 및 사용량을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각각 79.1%, 61.8%)을 했고, 평소 가정 전기요금에 ‘신경 쓰고 있다’ (77.5%)는 응답 역시 많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81.7%)이 남성(7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응답자의 81.5%가 집에서 전기 아껴 쓰기행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평상시 실천하는 절전행동 <중복응답>으로 ‘전등 소등’ (87.2%)이 가장 높았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81.1%),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플러그 뽑기’ (67.5%), ‘절전형 콘센트 쓰기’ (64.7%),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50.7%) 등에 노력한다고 답해 전기에너지 절약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소 가정에서 ‘생활형 절전실천’ 행동들은 성실히 수행하는 편으로 조사됐으나 회사나 공공장소에서의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력은 62.9%에 그쳤다.

특히, 가정에서의 ‘고효율 전구 및 전등사용’ (35.0%), ‘고효율 가전제품사용’ (50.7%), ‘절전형 콘센트 쓰기’ (64.7%) 등 ‘시스템적 절전실천’ 행동은 다소 미흡한 편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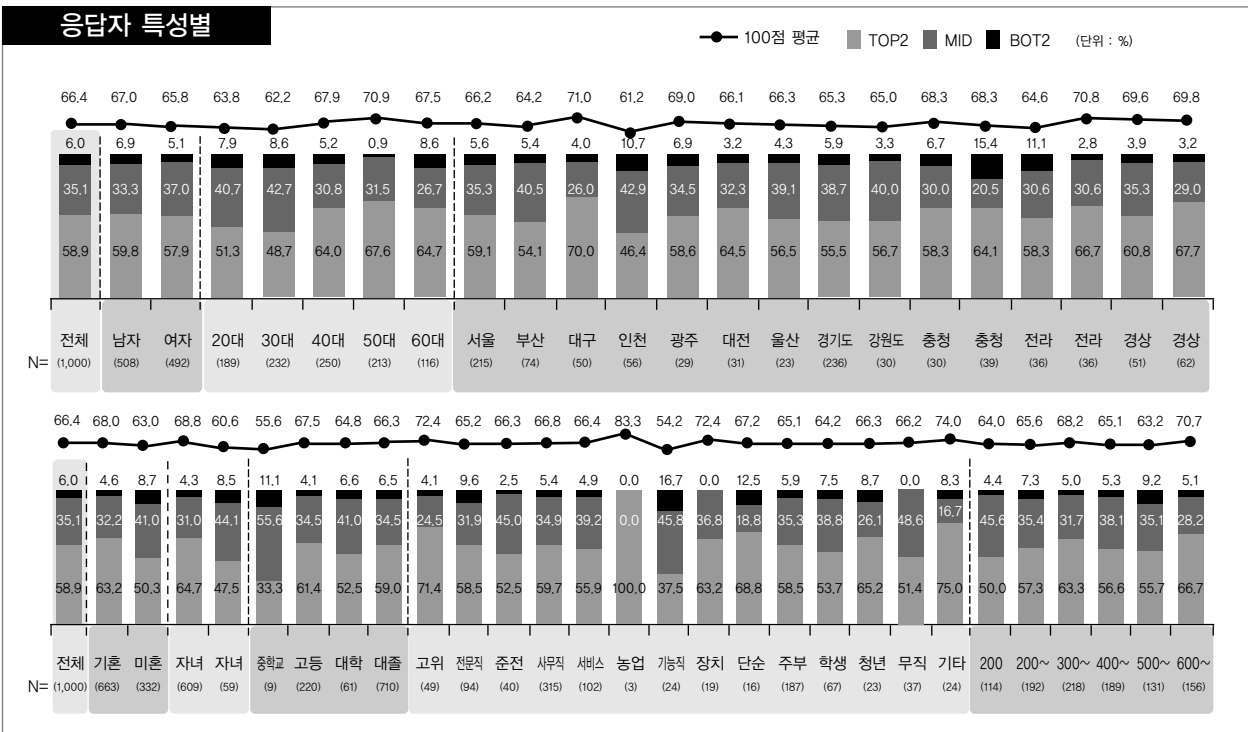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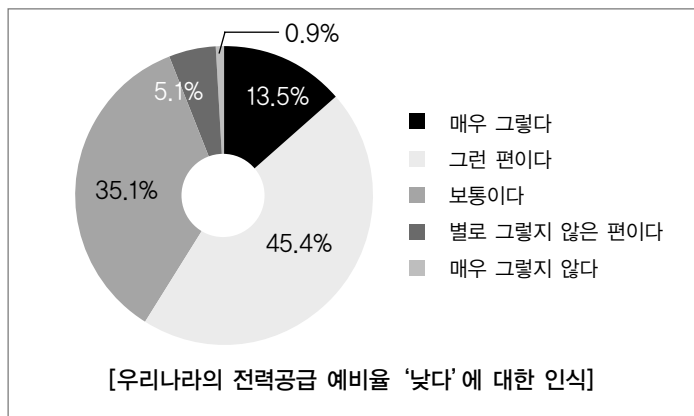
‘전기요금을 살펴보는 행동’ (79.1%) 대비 ‘전기소비를 살펴보는 행동’ (61.8%)은 17.8%가 낮았고, ‘집에서의 절전 행동실천’ (81.5%) 대비 ‘공공장소에서의 절전행동실천’ (69.2%) 은 약 18.6%가 낮았다.

현행 전기요금수준이 ‘전력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지’ 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한 응답자는 34.8%로 나타났다. 반면, ‘영향이 없다’ 고 답한 비율은 23.1%에 그쳤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응답은 42.1%로 유보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기절약행동 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 (34.5%)으로 전망한 비율이 ‘효과가 없을 것’ (33.7%) 이란 응답보다 다소 높았고, ‘평소 일시적인 정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느끼지 않는다’ (35.7%)란 답변이 ‘느낀다’ (29.9%)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2.2%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국민들 10명중 6명에 가까운 인원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예비율을 ‘낮은 편’ (58.9%)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다’ 는 의견이 35.1%, ‘높은 편’ 이란 응답은 6.0%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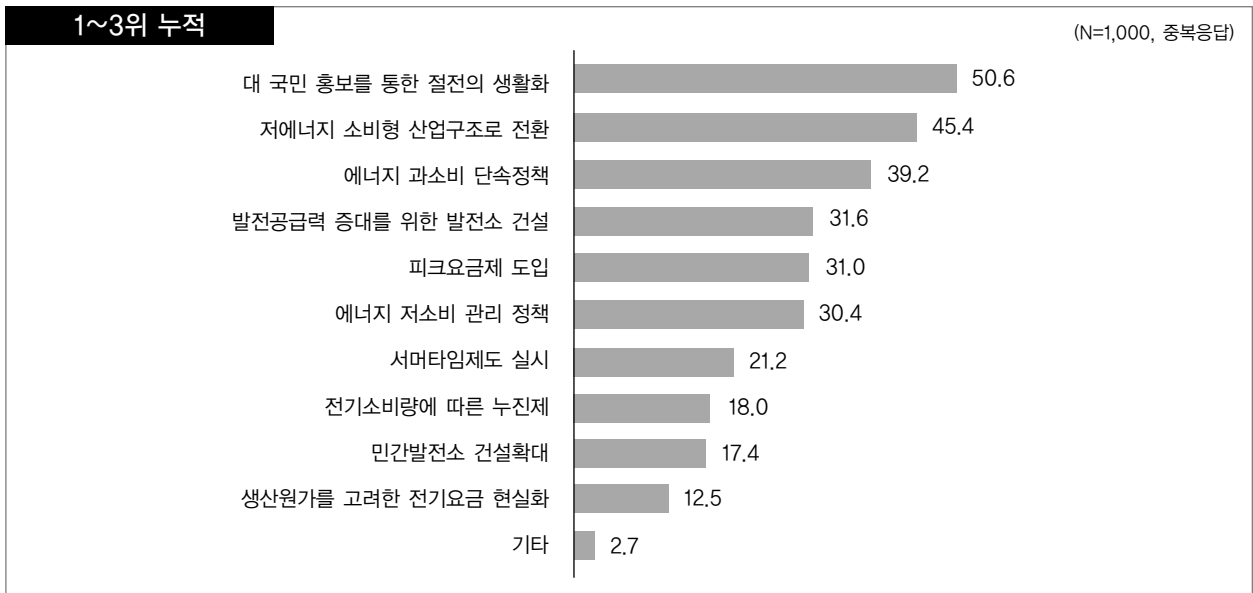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대구(70.0%)’, ‘경남(67.7%)’, ‘전남(66.7%)’ 순으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인천(46.4%)’, ‘부산(54.1%)’ 은 긍정률이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공급능력을 상회하는 전력수요의 주된 증가요인(중복응답)으로 '냉난방수요 증가' (6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력과소비행태' (57.0%), '고에너지소비형산업구조' (42.8%),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소비 증가' (34.4%), '전력수요예측 오차' (25.8%), '발전시설 부족' (22.8%), '산업체 전력소비증가' (21.1%)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분류해서 분석해 살펴보면, 냉난방 수요증가, 전력과소비 등 '일반소비증가' (150.3%)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에너지산업구조 등 '산업수요증가' (77.2%), '발전공급력 부족' (6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할 필요정책으로 국민들은 '산업수요관리정책' (115.0%)에 대한 중복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국민 홍보 등 '일반소비절감정책' (71.8%), 피크요금제 도입 등 '요금제도 조정정책' (61.5%), '발전시설 확충' (49.0%)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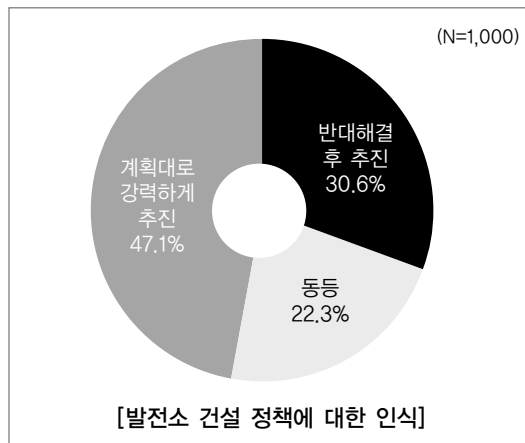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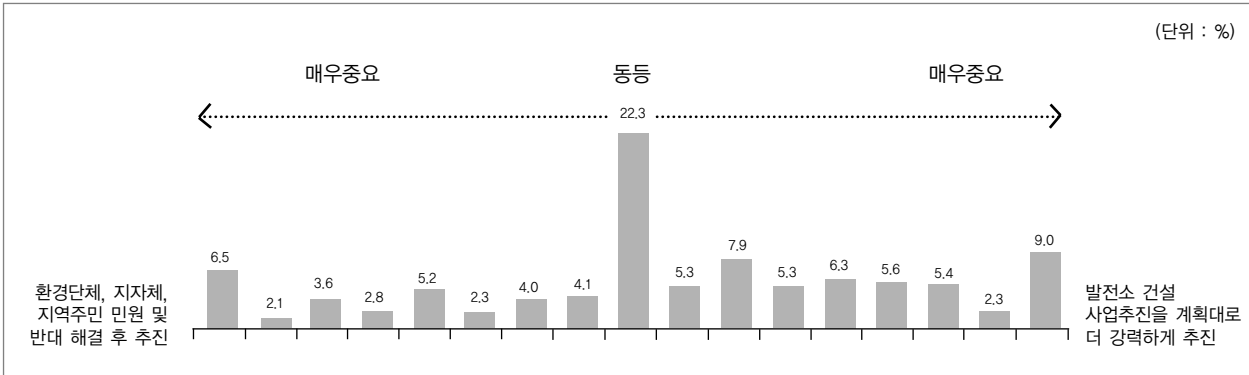


요인별 분류 분석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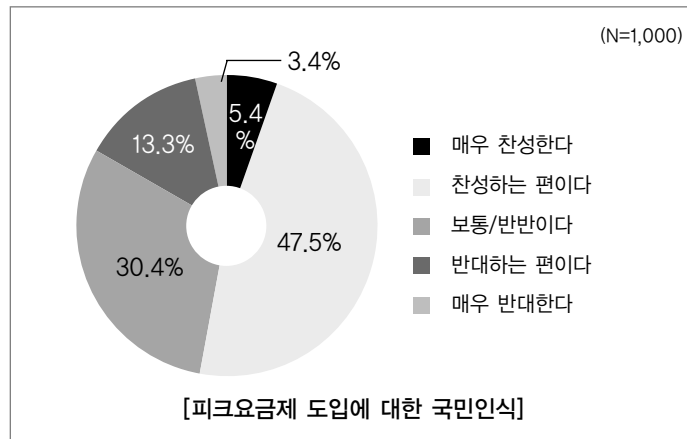
| | |
|--------------------------------|--|
| 산업 수요 관리 정책 (115.0%) | 많은 전기를 소비하지 않는 저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45.4 에너지 과소비 단속 정책(출입문 개방한 채 난/난방 금지 등) 39.2 에너지 저소비 관리정책(영업장 일정온도 유지 등) 30.4 |
| 일반 소비 절감 정책 (71.8%) | 대 국민 홍보를 통한 절전의 생활화 50.6 서머타임 제도 실시 21.2 |
| 요금 제도 조정 정책 (61.5%) | 피크 요금제 도입 31.0 전기 소비량에 따른 누진제 18.0 생산원가를 고려한 전기요금 현실화 12.5 |
| 발전 시설 확충 정책 (49.0%) | 발전 공급력 증대를 위한 발전소 건설 31.6 민간발전소 건설확대 17.4 |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여유있는 전력예비율 유지 위한 정책희망순위]

발전공급력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단체, 일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47.1%) 는 비율이 '민원 및 반대의사 해결 후 추진' (30.6%) 해야 한다는 응답률 보다 다소 높았다. 이 가운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응답비율은 22.3%로 조사됐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피크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52.9%)의견이 '반대' (16.7%) 하는 의견보다 많았고, '유보적' 인 의견도 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피크타임제 도입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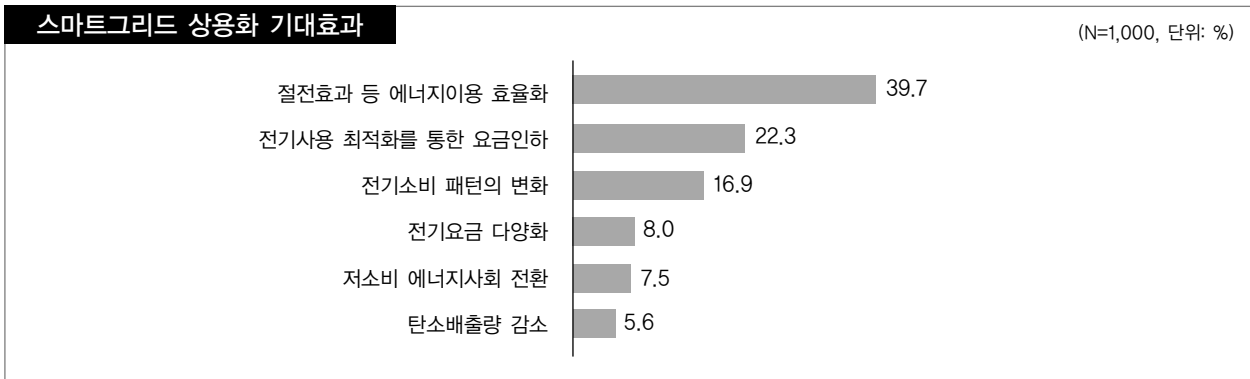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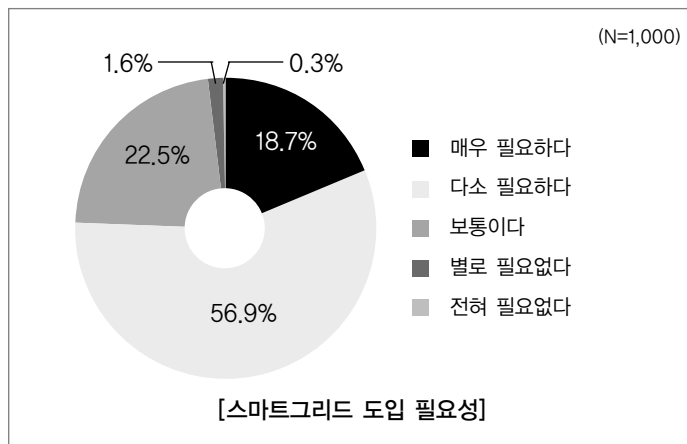


지난해 9·15 순환정전사태를 ‘기억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79.6%에 달했다. 또한, 9·15 정전사태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에 정전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 (75.3%)고 응답했고, ‘있다’는 답변 중 1회(51.8%) 경험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압유지율(99.99%), 호당 15.6분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정전시간, 4% 미만의 전력손실률을 달성하고 있는 높은 우리나라 전력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불안정한 전력수급상황이 ‘걱정 또는 심각하며 대규모정전사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5%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은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있다’ (71.5%)는 쪽을 선택했으며, ‘가능성이 적거나 없을 것’이란 응답은 27.5%에 그쳤고, ‘관심 없다’는 응답이 1.9%였다. 또, 국민들은 광역정전 발생에 따른 피해규모 조사에서 ‘병원/의료서비스 마비’ (67.2%)를 1순위로 꼽았고, 이어 ‘경제/산업피해’ (61.8%), ‘가정 및 거주생활 불편’ (40.3%) 순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세대 전력공급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인지도 설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73.5%)고 응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5.6%가 전력수급체계 개선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스마트그리드가 상용화될 경우의 기대치는 ‘매우 높음’ (75.6%)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절전효과 등 에너지효율화 기여’ (39.7%), ‘전기사용 최적화를 통한 요금인하’ (22.3%), ‘전기소비패턴의 변화’ (16.9%), ‘전기요금체계 다양화’ (8%), ‘저소비에너지사회 전환’ (7.5%), ‘탄소배출량 감소’ (5.6%)를 꼽았다.



또한,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머타임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39.8%) 태도를 취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찬성' (36.3%) 의견이 '반대' (23.9%)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1.4%가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란 이유로 서머타임제도를 찬성했고, 이어 '시간의 효율적 사용' (56.7%), '경제적효과 창출' (44.4%), '여가시간 증대' (21.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리듬 변화 불편' (55.6%), '기대효과 미미' (54.4%), '시간 혼동' (32.6%)을 주된 반대이유로 꼽았다. KEA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7/11~7/18
- ◎ 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20세 이상 69세 이하) 1,000명
- ◎ 조사목적 : 전력수급안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 정책대안 우선순위 파악
- ◎ 조사방법 : 온라인서베이방식

【세부조사현황】

이번 여론조사는 15개 광역시(제주도 제외)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했다.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패널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신뢰도 제고를 위해 패널응답자를 성별, 연령, 지역별로 균등한 비율로 선정했다. 조사응답자 현황은 남자(508명), 여자(492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189명), 30대(232명), 40대(250명), 50대(213명), 60대(116명)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직업별로는 직장인(643명), 가정주부(187명), 학업 및 기타(170명) 등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